

“ 나는 아니겠지... 나간 인원이 3만 명이다 ”

금속노조·울산본부 공동 결의대회... “구조조정 저지 투쟁, 현중지부와 함께”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4월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 울산본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강고한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에서 “돌아봐라, 과장급이 정리하고 당할 때 사무직의 문제겠지. 여성조합원이 쫓겨나고

전환배치 당할 때 생산직은 아니겠지. 물량팀 쫓겨 나갈 때 조합원이 아니니까 아쩔 수 없지. 내이든 외주업체 쫓겨날 때 내이 드셨으니 나가겠지. 이렇게 남의 일로 여겨며 나간 인원이 3만 명이다. 울산 동구의 주민도 2만여 명이 줄었다”라고 지적했다.

윤한섭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은 대회에서 “오늘 울산 노동청에 고용보험기금 5억 원을 유용한 현대중공업을 고발했다”라며 “현중 재벌은 직무교육을 핑계로 고용보험기금 5억 원을 받아 경주 골짜기에서 현중 조합원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노조 파괴 교육을 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박근태 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투쟁사에서 “현대중공업은 자구인을 100% 달성했다면서 희망퇴직을 강행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현대중공업지부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현대중공업 자본과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라며 “지부가 구조조정 저지투쟁에 앞장서었다. 연대투쟁의 힘으로 함께 구조조정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은 현대자동차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한다. 5만여 조합원과

함께 연대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연대사에서 “중형조선이 문재인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칼날을 가장 먼저 맞았다. 자본이 향한 희망퇴직, 전환배치, 교육, 휴식이 조선산업 전 사업장으로 번지고 있다”라며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떨치고,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맞서 단결투쟁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울산지부 이성호 현대중공업 새내청지회장은 “현대중공업 자본은 전 공정을 하청과 물량팀으로 채우고 있다”라며 “60세가 되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가 구조조정으로 나왔다가, 다시 하청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실상을 전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풍물패를 앞세우고 현대중공업 미포정문까지 행진했다. 울산 동구 주민들은 행진대오를 향해 현대중공업 재벌을 규탄하는 전단지들을 날리고, 현수막을 펼치면서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 노조파괴 최종 책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라 ”

26일, ‘삼성에서 노조하자’ 기자회견 열어... “오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과 실무교섭 시작”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4월 26일 서울 서초동 삼성 서옥 앞에서 ‘삼성 노조파괴 규탄, 이재용 재구속, 삼성에서 노조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이 저지른 범죄와 잘못을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주요 삼성계열사 앞에서 동시에 열었다.

민주노총은 “한국사회가 삼성이 지행한 노조파괴와 직업병 피해, 정경유착을 통한 불법경영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 반노동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라며 “모든 범죄의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재구속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직접 삼성의 무노조 경영 종식을 강제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4월 17일 노조활동 보장과 직접고용을 합의한 이후 이튿날 분회가 새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삼성전자서비스

회 조합원 수가 일천 명을 넘고, 열다섯 개 이상의 분회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과 실무교섭을 시작한다. 금속노조는 실무교섭을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삼성 제조업체 계열사 노동자 조직사업을 벌이고, 다른 업종 산별의 조직사업을 엄호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세 시간마다 노동자 한 명, 산재로 사망 ”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대회... “산재 예방제도 무력화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 계속”

“ 온도가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수은중독으로 열다섯에 생을 마감한 청년 문승연과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지금까지 229명이 사망한 원전레이온 사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한 해 노동자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나라다.”

민주노총은 ‘ 428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을 맞아 4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민주노총 결의대회 ’ 를 열어 ‘ 세 시간마다 한 명이 죽고, 오 분마다 한 명이 다치는 한국사회의 노동 현실 ’ 을 고발하며 재벌 대기업과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근절을 위한 원청 책임 강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과로사 장시간노동 실태조사와 대책이런 ▲ ‘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 폐기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급증하는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청 외주화에 있다고 비판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으로 한 해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쓰러지는데도 정부가 노동시간 특



례를 유지해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 산업 안전대책은 언제나 기업의 이윤 우선 논리에 밀리고 있다.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에 산재사망사고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노동자들이다 ” 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금속노조는 같은 장소에서 ‘ 산재사망 예방제도 무력화 고용노동부 규탄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 ’ 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 하루 평균 일곱 명의 노동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고, 기계에 끼여 죽고, 추락해 죽어도 노동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사업주를 봐주고 산재예방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라고 규탄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 산재 예

방제도를 무력화하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 퇴진투쟁을 아슬프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 위원장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함께 이 투쟁을 진두지휘하겠다 ” 라고 결의를 밝혔다.

본 대회 투쟁발언 순서에서 이한솔 한빛 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는 “ 카메라 뒤 노동자의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 ” 라며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 노동을 증언했다.

송경용 과로사이웃대책위 공동대표는 “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우리 사회 외형은 수백 배 커졌지만, 노동과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인식은 제자리다 ” 라며 노동자의 휴식은 ‘ 인간으로서의 존엄 ’ 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서울 고용노동청을 지나 명동 신세계 백화점까지 행진했다. 신세계 백화점 앞에서 노동자들은 최근 이마트에서 무명워크를 수리하다 숨진 청년노동자와 체재 임금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캐시 노동자를 추모하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책임자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포스코, 삼성, 신세계 이마트 등 재벌 대기업의 위험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을 찢으며 대회를 마쳤다.

“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하는 시스템 구조화 필요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토론회...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도 강제장치 뒤야”

2018년 7월 17일부터 최저임금 등이 올라 공급 원가가 증가하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올해 1월 16일 개정된 하도급법 16조는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 공급원가 ’ 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할 때만 적용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4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를 열었다. 토론자들은 시행을 앞둔 납품대금 조정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하청 협력업체가 지속 체감적으로 분담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 최저임금 지속해서 오르려면 협력업체의 저임금 구

조를 강요하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분담하는 시스템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 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정점으로 ‘ 전속 거래 관계 ’ 가 대다수인 사업장과 집단 노사관계를 맺고 있는 금속노조는 김남근 정책위원장이 제시한 과제와 제도 보완에 대해 ▲초기업 집단 노사관계 구축 ▲노동이사제 등 내부건제 장치 마련 ▲하도급 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 모색 ▲임금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